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새해가 되면 우리는 양력과 음력 두 차례에 걸쳐 복을 주고받는 인사를 나눈다. 관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정겨운 관습이다. 록 밴드 '퀸'의 고향인 영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큰 대중적 인기를 얻은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 (2018, 브라이언 싱어)가 해외 특집 기사에 나올 정도로 대단한 기록을 세운 것도 기어를 먹고 사는 문화적 관습의 힘을 보여 준다.

새해와 함께 밀물처럼 다가온 체육계 미투 릴레이도 기억의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며칠 전 '반복되는 미투 운동이 지겹다'라는 일부 반응을 근거로 인용하며 '미투 피로'를 제목으로 내건 언론 보도를 발견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구촌에 자리한 한국의 사회 문화 관습과 기억 코드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새삼 돌아보게 만든다.

2018년부터 가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아파도 깨야 하는 침묵의 카르텔

제기된 문화 예술계 미투 파장은 단기간에 청산될 문제가 아닌 오랜 관행이란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병든 관행 문제를 담당할 전문 기관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체육계 미투 파장은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구촌 미투 운동을 촉발한 미국 영화계 성폭행 고발 사건이 발생한 2017년 10월 이전에 한국 체육계에서 미투 운동은 이미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0월 초등학교 시절 테니스 코치의 성폭행 사건을 고발한 김은희 테니스 코치는 오랜 투쟁 끝에 가해자의 10년 징역형을 끌어낸 바 있다. 그때 잡았던 언론은 빙상 쇼트트랙 심 선수가 2019년 1월 8일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당했던 성폭행을 고발하면서 조금씩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시 미성년자인 17세였다. 언론이나 체육계의 침묵 깨기가 금메달을 딴 엘리트 선수에 대한 배려로 이해하고 넘어가 기엔 아픈 현실이다.

그 파장에 용기를 얻은 전직 유도 선수 역시 2018년 경찰 신고를 해도 지지부진한 수사에 저항해 신분을 공개한 뒤 고교 시절 (2011년~2015년) 코치의 '따까리' 노릇을 하며 당했던 성폭행을 고발했다. 처음에는 가해자 실명이 'A 도 씨'로 나

와 오히려 '가해자 중심 인권 보호인가'라는 의혹 속에 피해자 이름을 불인 성폭행 사건으로 불렸다. 이런 적반하장식 상황에 공분한 대중적 요구로 이젠 가해자 실명 '손 도 씨'로 부분적 실명이 공개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이어 태권도 분야에서도 성폭행 사건이 고발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젊은 빙상 연대'에서 고교생이 포함된 성폭행 피해 사례 공개를 예고하고 있다.

기이한 침묵의 카르텔을 목격하는 와중에 AP통신이 2018년 미국 스포츠 뉴스 1위로 선정한 체육계 미투 운동의 여파가 떠오른다. 미국 체조 대표 팀 주치 의였던 래리 나사르가 지난 30여 년에 걸쳐 미성년 체조 선수들을 성추행·성폭행한 사실로 2016년 8월 고발당했다. 재판 중이던 이 사건에 2017년 영화계 미투 운동 열기가 전해져 2018년 1월부터 '체조 여왕' 시몬 바일스를 비롯해 150여 명의 이상의 전·현직 대표 선수들이 나사르의 성추행·성폭행을 증언하면서 침묵을 깬다.

그 결과 연방 재판에서 나사르는 175년형 선고를 받으면서 2018년 미국 체육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성과로 기록됐다. 이런 범행을 알면서도 그간 침묵해 온 미국 체조협회는 비판을 받았고, 스

콧블랙문 미술립위원회(USOC)위원장, 앨런 애슬리 USOC 경기 향상 책임자 등 체육계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서 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중이다. 침묵의 카르텔은 한국 체육계만의 현실은 아니라고 워로받기보다 그 대가로 치르는 공적 차별과 사회적 책임감을 동병상련 사대로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진행형인 과거의 아픈 기억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침묵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그 침묵이 조금씩 깨져 나가는 중이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보다 가해자 실명 공개가 더 중요하며 그것이 피해자 인권 보호이다. '위더스'(with us) 운동 또한 미투 운동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며 진행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퀸'이 라이브 공연 말미에 관중과 함께 부르며 열기를 나누는 '우리는 챔피언'(We are the champions)의 가사가 전·현직 선수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격려하는 응원가처럼 들려온다. "난 절대 지지 않아/ 우린 챔피언이잖아, 나의 친구들이/ 우린 끝까지 계속 싸울거니까.../ 패배자에게 남겨진 시간이란 없어, 우린 이 세상의 챔피언이니까" 인생판 경기에서 패배자란 없기에 이 노래는 시대와 세대를 넘어 작동하는 중이다.

社說

하나의 권역에 두 개의 공항, 공멸 걱정된다

전북 지역의 새만금 신공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될 경우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총사업비 500억 원이 넘고 국고 300억 원 이상 지원되는 신규 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광역지자체별로 대형 사업 1건씩 예타를 면제해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해 놓은 예타 면제 요청 사업은 38개에 총사업비는 70조4614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새만금 공항의 예타 면제 조정이 보인다는 점이다. 일례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전북이 원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타 면제 결정이 이달 안에 결정된다"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새만금 신공항의 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호남권에 2개의 국제공항이 운영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이는 두 공항의 수요가 겹치기 때문인데 자칫 새만금 신공항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 요구로 인해 예타 면제를 받고 건설한 양양 공항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고용 참사와 경기 침체로 위기에 몰린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남발한다는 비판 여론도 없지 않다. 정부는 하나의 권역에 두 개의 국제공항을 육성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인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허위 검침에 '요금 폭탄' 투하 주민이 봉인가

광주시가 시내 수백 가구에 평소보다 최고 7~8배나 많은 수도 요금을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검침원이 수개월간 수도 사용량을 검사하지 않은 채 허위 기재했는데, 나중에 벌 받은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누진제까지 적용한 것이다.

광주시 서구 삼촌동과 농성동 지역 수도 검침을 담당하는 광주시 상수도본부 서부사업소 소속 A씨는 지난해 2~9월 사이 계량기를 직접 검침하지 않고 허위로 사용량을 기재했다. 이 과정에서 420여 가구에 실제보다 절반 가까이 적은 사용량이 입력됐는데 일부 시민은 지난해 4월께 상수도본부에 '요금이 적게 나온 다'고 알리기도 했지만 묵살당했다.

서부사업소는 민원 제기 7개월 후인 지난해 11월에야 뒤늦게 이들 가구에 그동안 누락된 요금을 재산정하고 사용량에 따라 추가되는 누진분까지 부과해 고

지서를 보냈다. 이로 인해 평소 5만~7만 원대의 요금을 냈던 일부 가구는 30만~50만 원대의 '요금 폭탄'을 맞았다. 하지만 서부사업소 측은 허위 검침과 누락 요금 부과 사실을 본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수도본부는 광주일보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니 한심한 일이다.

허위 검침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주민들의 이의 제기를 묵살하고 정확한 설명도 없이 수개월 지 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누진까지 적용한 것은 무척 인행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는 행정의 수순도 본부에 '요금이 적게 나온 다'고 알리기도 했지만 묵살당했다.

서부사업소는 민원 제기 7개월 후인 지난해 11월에야 뒤늦게 이들 가구에 그동안 누락된 요금을 재산정하고 사용량에 따라 추가되는 누진분까지 부과해 고

교단에서

'○○쌤'



김진우
일신중 교장

언어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성이다. 사회 구성원 간에 약속된 기호의 의미가 있다. 어느 한 개인이 바꿀 수 없고 바뀌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고정불변도 아니다. 사투리도 많이 쓰면 표준어가 되고, 표준어도 안 쓰면 소멸된다. 잘못 쓰인 단어의 뜻도 다수의 언중(言衆)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자리를 잡는다.

'적당(適當)'이란 말은 '꼭 들어맞다, 알맞다'는 뜻이지만 지금은 '대충'이란 뜻으로 더 쓰인다. '적당주의'란 말까지 만들어지면서 '적당히 하라'고 하면 '대충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낙산'이란 단어도 이 추세로 계속 쓰이면 '전문성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권력이나 뒷배경으로 한 자리 차지한 사람'을 뜻하게 될 것이다. 어차구니(맷돌의 손잡이) 없

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시치미(매이름표) 때는 일이 다반사(차와 밥)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집안의 이모는 점점 사라지고, 식당에서 샴쌍둥이를 도와주는 여성분들이 이모가 되고 있다. 신랑 대신 '자기'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오빠'가 딱 자리 잡고 있다.

인칭 대명사 중에 '당신'이란 말은 상대방을 조금 높은 의미가 기본이다. 부부간에 '여보 당신'할 때는 알콩달콩 부르는 호칭이 되고, 조상이나 종교적인 의미로 쓰일 때에는 아주 높임말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언쟁이나 시비가 붙게 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을 얕잡아 가리키는 의미로 쓰여 폭발의 불씨가 되는 말이기도 하다. '언제 봤다고 당신이!', '뭐, 당신?' 이 정도로 쓰이면 상황을 견잡을 수 없게 된다.

'선생'과 '선생님'도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의미의 깊이가 달라진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선생이라 하고 여기에 접미사 '님'을 붙여 존칭의 '선생님'이 된다. 하지만 '선생님'은 관습적 평범한 존칭어이고, '선생'은 선각자생(先覺之生)의 준말로 먼저 깨달아 덕망과 학식을 갖춘 한 시대의 사표가 된 큰 인물을 가리키는 극존칭어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선생으로 추앙받는 인물은 매우 드물다. 김구 주석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존경의 의미를 담아 김구 선생으로 더 쓰인다. 2천여 년의 황제 제도를 폐지한 신해혁명의 손문도 국부, 대통령 대신 손문 선생이다. '율곡 선생'처럼 사용할 때에는 성명이나 별호에 붙여 쓰지 이름에 붙여 쓰지 않는다.

연초에 서울시 교육감 '희연 쌤'이 교육계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면서 몇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그 중 한 영역이 수평적 조직 문화인데 구성원간의 호칭을 '○○쌤, ○○님'으로 통일하고, 교직원 학생 모두 하절기에 반바지, 샌들 차림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여론이 들끓자 '학생이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은 변경할 계획이 없고, 교직원끼리만 적용할 방침이었다'고 물러서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렇게 지침을 내리지 않아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라는 존칭이 사라지고 있다. 이미 '○○쌤'이 대세이다. 수업시간은 물론이고 교무실이나 복도 등 어디에서도 이 호칭이 들린다. 그리고 교원과 직원간에 위화감을 없애고 친근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라면 상호 '선생님'이라 부르던 될 것이다. 이 호칭 사용도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사회가 각박해 질수록 언어는 격음화 현상이 생기고 더욱 거칠어진다. 지역과 거리, 국경을 넘어 지상의 어느 곳과도 실시간 쌍방 소통이 가능한 오늘날 약자나 기호, 조어가 수시로 생성소멸하고 있다. 세대간의 장벽뿐만 아니라 동 세대간에도 의미를 잘 모르는 말이 쓰이고 있다. 시류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언론이나 공공기관 특히 학교 현장이나 교육 기관에서는 바르게 쓰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한다.

영를 톨 같기도 하고,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한 '쌤'. 표준어도 아니고 존칭의 미도 희박한 '쌤'을 이름과 함께 붙여 쓰라는 이 지침. 교육부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 많은 권한을 주고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 호칭 하나, 복장 모양까지 정해준다는 것은 전형적인 상급 기관의 수직적 조직 문화 발상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 9월에는 열색, 파마를 자유롭게 하여 '아침이 설레는 학교, 학교가 아쉬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금년 초에는 '○○쌤'이라 부르고 반바지, 샌들을 하하노라 한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 더 심각하고 큰 문제가 산적해 있을 것인데...

기고

2019년 광주, 이제는 오명을 벗을 때다



김양식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

광주는 1980년 5월 민주화의 함성이 울려 퍼진 민주화의 성지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킨 세계 속의 인권 도시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광주 하면 떠오르는 불명예스러운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 1위와 보험 범죄 온상이다.

먼저 교통사고 부문을 살펴보면 2017년 광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7명으로 2016년 85명에 비해 38% 증가하는 등 잦은 사고와 인명 피해로 '교통사고 많은 곳'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다.

또한 광주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 전국 지역 안전 지수' 교통사고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5등급이라는 최하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광주 동구는 4년

연속 교통사고 부문 5등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불법 주정차 문제다. 교차로 부근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이나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은 자동차의 소동과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의 통행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의 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야간 불법 주치는 기관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엉망이다. 단속이 그만큼 느슨하다는 반증이다. 지자체 등 관할 기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두 번째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너무 많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안전보다는 소통에 중점을 둔 것이다. 신호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세 번째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방향 지시등은 본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방향 지시

등을 켜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이자 필수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광주의 불명예스러운 부문 두 번째는 광주가 '보험 범죄의 온상'이라는 점이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한방병원 308개 중 광주에 88개가 난립해 있다. 서울의 두 배다. 2017년 10월 기준 광주경찰청이 적발한 보험 사기범 1100명 중 한방병원 관련범 사기범이 728명에 이른다. 전체 적발 인원의 65.6%를 차지한다. 특히 의료 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

광주 지역에 한방병원과 사무장 병원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로 진단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입원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입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무턱대고 입원하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두 번째는 개업과 폐업이 쉽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체계로는 보험 사기로 판정받은 병원이 명의만 바뀌 동일한 장소에 다시 열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간판만 바뀌 단 병원이 끊임없이 개·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문 수사 인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신종 사기 수법은 날이 진화하는데 수사 인력이나 전문성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가 보험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먼저 한방병원 인·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방병원의 인·허가는 각 구의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전 등 타 시도처럼 광주시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법 집행기관인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도 보험범죄 척결 의지 또한 중요하다. 보험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 수사 인력 확보도 더불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 범죄에 대한 광주시민의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쉽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유의해야 한다.

2019년 광주는 세계수영선수권이라는 국제적인 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세계 속의 광주에 걸맞게 2019년에는 '교통사고 많은 지역', '보험 범죄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민주화의 성지요, 예방의 도시로서 자긍심이 살아 숨 쉬는 광주가 되길 기대해 본다.

無等鼓

카카오가 지난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다. 계속되는 택시 업계와의 갈등 때문이었다. 카풀은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슷한 목적으로 향하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정부는 카풀을 도입하면 남은 차량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출퇴근 시간 등 택시를 잡기 힘든 시점에 카풀을 활용하면 시민의 택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행담에 따라 방직업과 양모 공업에 있어서 기계가 사용됐고 이는 종래의 제조 직공들을 실직시키고 임금 수준도 떨어뜨렸다. 이에 노동자들이 기계가 없다면 과거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거라고 보고 기계를 파괴한 것이다. 정제 불명의 지도자 N.러더리는 인물이 주도했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이다. 이후에도 신기술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운동은 계속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신라다이트 운동이라 칭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택시 노동자들의 반발을 종종 러다이트 운동에 비유하기도 했다. 문제는 과연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을 일부 집단의 반발로 막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생각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발로 신기술·서비스의 등장과 직업의 재편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다행히 지난주 택시 관련 단체가 사회적 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더니 부디 이 기구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 그리고 그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택시나 카풀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되길 희망한다. /서울취재본부·박지경 부장

카풀과 러다이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220-0697	(FAX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